

# 글로벌 IT전략과 디지털 외교전략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기금 교수  
김상배(sangkim414@hotmail.com)

## I. 글로벌 정보사회와 WSIS

최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IT)의 문제는 국내적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정보사회의 이슈로서 부상하고 있다. 사실 19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IT 전략이라고 하면 주로 국내적 차원에서 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정보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IT분야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IT관련 통상확대와 기술협력 등과 같은 글로벌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경쟁을 지원하는 활동으로서 이해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화의 진전이라는 맥락에서 제기되는 IT전략의 양상은 경쟁을 넘어서 협력을(또는 적어도 협력을 통한 경쟁을) 지향하는 새로운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IT를 둘러싼 초기의 양상이 국가간(또는 기업간) 경쟁의 '원초적 이미지'에 기반을 두고 협력의 문제를 단순히 수사적인 것으로 치부하였다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IT를 둘러싼 양상은 경쟁의 이미지에 국가간(또는 기업간) 협력이라는 '국제사회적 이미지'가 중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IT문제는 더 이상 경제적 이슈의 보충적 의미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의 글로벌 정보사회의 이슈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정보사회 도래의 단면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이다.<sup>1)</sup> 2001년 6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은 UN회원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글로벌 정보사회의 도래에 대비하는 국제협력의 방안을 논의하는 WSIS를 2003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로 개최할 것이며, 2005년에는 튀니지에서 제2차 WSIS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 하에 2002년 7월 1일부터 5일에 걸쳐서 스위스 제네바의 ITU 본부에서 WSIS에 대한 준비작업을 위해 '제1차 고위급 전체준비회의(Preparatory

---

1) WSIS의 배경과 의제 및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로는 다음을 참조. 서보현(외),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WSIS)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2003.2); ITU에서 주관하는 WSIS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도 유용함. <http://www.itu.int/wsis/>

Committee 1, 이하 PreCom-1)'가 열렸다. PreCom-1에서는 2003년의 제네바 정상회의와 관련된 진행절차와 기본원칙 및 의제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PreCom-1에서는 WSIS의 주제 및 의제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보격차 해소와 같은 정보화 관련 개발문제나 민간부문의 참여 범위 등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가 개선되는 가운데 회원국들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2년 9월 16-18일에는 제1차 준비회의에서 미진했던 WSIS의 의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비공식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2002년 9월 23일부터 한달동안 모로코의 말라케쉬에서 열린 ITU 전권위원회에서도 WSIS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ITU 전권위원회 기간 동안에는 특히 ITU 차원에서 WSIS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1)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 2) 정보기술을 통한 개발목표(development goals)의 달성, 3) 정보기술 사용에 있어서의 신뢰와 보안 등과 같은 세 가지의 차원에서 WSIS의 원칙과 행동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2003년 2월 17-28일의 '제2차 고위급 전체준비회의(PreCom-2)'가 개최되었으며, 2003년 9월의 '제3차 고위급 전체준비회의(PreCom-3)' 등을 거치면서 WSIS의 기본원칙 및 의제 등이 보다 구체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WSIS의 준비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선 WSIS가 정보화만을 단일주제로 하여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사상 최초의 자리라는 점에 있다. UN 산하의 ITU가 주관하여 세계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글로벌 정보사회의 미래를 놓고 논의를 벌인다는 점에서 세계인의 삶 속에 정보화가 벌써 커다란 영역을 확보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WSIS의 준비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WSIS의 과정을 통해 향후 21세기 글로벌 정보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고 정보화 분야의 기본틀을 수립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WSIS의 준비와 향후의 정보화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21세기 글로벌 질서가 태동할 것이 예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WSIS에 대한 대응전략은 한국으로 하여금 단순히 WSIS라는 '국제회의에의 참가전략'을 넘어서는 'IT분야의 총체적인 미래전략'의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WSIS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정보사회에 참여하는 한국의 IT전략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입체적인 구도 하에서 WSIS에 대한 참여전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한국의 IT전략에 있어서 '글로벌 IT전략'의 발상을 넘어서는 '디지털 외교전략'의 발상이 필요함을 피력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 차원의 추진과제로서 WSIS의 준비방안에 대한 제언과 함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외교전략의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구상을 제안을 할 것이다.

## II. 새로운 전략 발상의 필요성

WSIS의 준비과정을 통해 한국이 모색해야 할 미래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기본적인 발상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의 정보화전략은 세계질서 변동을 대변하는 두 개의 키워드인 정보화와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의 의미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글로벌시대를 향한 정보화전략’의 측면과 ‘정보화분야의 글로벌 외교전략’의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IT전략의 차원에서 볼 때, 정보화전략은 여태까지는 국내적인 차원에서만 구상되고 진행되어온 정보화의 성과와 한계를 돌이켜보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시대의 IT전략’을 마련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외교전략의 차원에서 볼 때, 정보화전략은 정보화 분야의 세계질서 형성에 있어 선진국의 주도권을 견제하고 한국의 리더십과 이해관계를 투영하려는 ‘디지털시대의 외교전략’을 의미한다.

### 1) 글로벌 IT전략의 발상

먼저 글로벌 시대의 IT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은 그 정보화의 수준에 걸맞은 국제적 정보화전략의 노력을 일정 정도 벌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아·태 정보인프라(APII,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하는 등 국가간 IT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는 트랜스유라시아 네트워크(TEIN, 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사업을 제창하였고, 아울러 e-APEC의 건설 및 APEC 차원의 전자정부 협력사업에도 주도적으로 나섰다.<sup>2)</sup> 동일한 맥락에서 APEC과 ASEAN+3 회의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이 디지털 평등사회 구현을 주창하면서 각국 정상들의 동참을 끌어낸 제안을 한 것도 의미있는 국제적 정보화전략의 일환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국제정보격차해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의 파견이나 개발도상국의 IT인력 초청 연수사업에서부터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도하는 DGF(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관련 사업에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일정정도의 국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국이 활발한 국제적 정보화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 동안의 IT산업의 육성과 정보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국가적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국제적 정보화전략은 실제로 CDMA와 같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경쟁력이나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인터넷 보급 등과 같은 성공적인 정보화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IT분야의 현장에서 일군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보화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역으로 이러한 홍보전략

2) 서보현(외)(2002. 2), 「국제기구의 주요정보통신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을 통해 국내 IT산업의 대외진출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IT기업들과의 기술협력의 기회도 증진하려는 다차원적 글로벌 IT전략의 구상이 이미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2002년 초반에 완성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글로벌 리더 e-Korea Vision 2006」은 그 동안의 정보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을 정보화의 실질적인 글로벌 리더로 정립하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방안들을 담고 있다.<sup>3)</sup> 또한 2002년 월드컵 기간 동안 벌어진 한국의 IT 홍보에서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APEC 전자정부 협력사업의 주도권 행사도 정보화 분야에서의 한국의 역량과 이에 기반을 둔 글로벌 IT전략의 추진을 엿보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보사회의 도래에 대응하는 본격적인 미래전략의 추진이라는 면에서 볼 때 한국의 정보화전략은 아직도 미흡한 점을 많이 안고 있다. 여태까지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전략은 IT 관련 통상확대와 기술협력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경쟁을 지원하는 경제와 산업 위주의 발상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정보화전략이라고 하면 주로 국내적 차원에서 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정보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국가간(또는 기업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기술·정보·지식 분야의 규범과 질서의 확립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보화를 둘러싼 국가간(inter-national) 협력전략은 있었을지라도 정보화와 글로벌화라는 맥락에서 제기되는 글로벌 외교전략은 없었다. 다시 말해, 산업화시대의 아날로그 외교전략을 넘어서 지식정보시대에 대응하는 디지털 외교전략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 2) 디지털 외교전략의 발상

외교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정보화의 문제를 외교전략의 이슈로서 인식하는 데 부족했다. 최근 세계질서의 변화는 글로벌화와 정보화는 별개로 진행될 수 없으며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현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세계질서의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키워드인 글로벌화와 정보화는 여태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국내적 차원에 국한되어 각국별로 진행되어온 정보화가 이제는 글로벌 이슈로서 부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보혁명의 진전에 따라서 국가적 목표로서의 정보화의 추구는 국가들로 구성된 기존의 국제체제의 기본성격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동력으로 작동하면서 새로운 21세기 세계질서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정보화의 진전은 경제와 산업의 전략을 넘어서는 외교전략으로서의 정보화전략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접근을 요구한다.

3) 정보통신부(2002. 4.), 「e-Korea Vision 2006: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전통적으로 외교는 주로 전쟁과 평화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소위 ‘안보외교’를 의미하였다. 2차대전 이후 경제·통상영역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통상외교’도 외교의 개념으로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의 외교 전담부처의 명칭이 ‘외교통상부’라는 사실은 군사안보와 경제통상의 두 영역을 중심으로 한 외교에 대한 한국의 개념적 이해를 반영한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제3의 외교영역’으로서의 기술·정보·지식영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산업협력이나 기술표준과 관련된 국제협상이나 기술·정보·지식 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에 대한 외교적 차원의 대응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다.<sup>4)</sup>

한편, 정보혁명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외교의 영역이 출현하는 것과 함께 외교를 담당하는 행위주체도 다양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외교라 하면 국가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였으며 이러한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에서 외교전담부처의 외교관이 그 주체로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기술·정보·지식의 세계정치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내의 실무부처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민간인의 역할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이들을 엮어내는 외교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정책 네트워크(public policy networks)’의 구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외교의 주체들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서 부각되고 있다.<sup>5)</sup>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정보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디지털 외교전략을 입체적으로 구상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디지털외교의 개념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이해부족이다. 산업화시대의 아날로그외교와는 달리 정보화시대의 디지털외교는 정보기술이 창출하는 새로운 시공간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넓은 영역과 보다 많은 주체들을 포괄하는 복잡한 모습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화시대를 맞는 외교의 변화를 그 과정과 영역 및 주체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정보화를 둘러싼 세계환경의 심층적인 변화를 미리 읽어내고, 더 나아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미래전략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sup>6)</sup>

### Ⅲ. 새로운 정보화전략의 추진과제

4) Dizard, Jr., Wilson(1998), *Digital Diplomacy: U.S. Foreign Policy in the Information Age*. Westport, Conn.: Praeger, 2001; Ryan, Michael P. *Knowledge Diplomacy: Global Competition and the Poli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5) Mathews, Jessica T.(1999/2000), “Power Shift: The Age of Non-State Actors.” *Foreign Affairs*(January/February, 1997); Reinecke, Wolfgang H. “The Other World Wide Web: Global Public Policy Networks.” *Foreign Policy*, 117.

6) 정보화시대 외교(外交, diplomacy)의 개념에 대한 포괄적 논의로는 김상배(2002, 가을), “정보화시대의 외교: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36(3), pp.269-88를 참조.

한국의 정보화전략은 글로벌 IT전략의 추진과 함께 디지털 외교전략의 발상을 지니고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WSIS의 현안에 대한 준비와 함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외교전략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여건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1) 단기적 추진과제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WSIS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이 당면한 정보화 부문의 중요한 과제이다. WSIS의 과정을 통해 향후 21세기 정보화 분야의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 WSIS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 정보화 분야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글로벌 IT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03년 12월로 예정된 WSIS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준비작업의 진행을 위해서 한국은 1) WSIS 실무반 운영 및 WSIS웹사이트의 구축, 2) WSIS의제의 체계적 연구, 3) WSIS에 대응하는 사회적 합의기반의 마련 등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왔다.

첫째, 통상적인 실무반의 PreCom 및 정상회의 참여 준비와 더불어 WSIS 웹사이트의 구축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준비활동을 벌여오고 있다.<sup>7)</sup> 여기에 덧붙여 WSIS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WSIS 준비활동을 총괄하는 웹사이트를 마련함으로써,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 분야 준비활동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 민간기업, 전문가 그룹이 독자적인 WSIS 준비활동을 벌이면서도 웹사이트를 통해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WSIS 및 정보사회 이슈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WSIS에 대한 대국민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보화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역으로 국제사회의 피드백을 받는 사이버교류의 장으로서 WSIS웹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WSIS준비를 위한 웹사이트의 구축 및 활용을 계기로 하여 디지털시대의 사이버외교(cyber diplomacy)를 추진하는 발상이 필요하다.<sup>8)</sup>

둘째, WSIS 의제의 심층적 연구 및 한국의 위상설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전세계 모든 지역 및 여러 주체들이 WSIS 준비를 위해 활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 WSIS 준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제들을 분석하여 국가별, 지역별, 국가군별, 국제기구별 입장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논의의 지평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이슈별, 지역별, 국제기구별로 WSIS의 준비동향을 파악할, 학계, 연구소 및 민

7) 국내의 wsis 관련 웹사이트로는 정보통신부의 후원 하에 정보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http://www.wsiskorea.org>와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http://www.wsis.or.kr> 등이 있다.

8) 하영선(편)(2001), 「사이버공간의 세계정치: 베스트 사이트 1000 해제」, 이슈투데이.

간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 ‘WSIS 연구를 위한 워킹그룹’이 운영되고 있다.<sup>9)</sup> 이러한 연구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정보화 맥락에 적실성이 있는 의제들을 발굴하고 분석·검토하여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끝으로, WSIS에 대응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WSIS는 정부만의 회의가 아니며 시민단체, 업체 및 학계 등 국내 민간부문이 이미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2003년 5월 정부, 시민사회단체, 민간업체 등이 참여하는 「WSIS를 위한 한국포럼」을 통해 정보사회와 WSIS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포럼의 결과물이 WSIS 의제 설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sup>10)</sup> 정보사회의 세계질서 형성과정에 국내 시민사회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WSIS의 준비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글로벌 IT전략의 완성을 위해서는 민간 IT 관련 기업들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WSIS를 위한 한국포럼’ 등을 계기로 하여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정보사회의 미래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벌여볼 필요가 있다.

## 2) 중장기적 추진과제

2003년 WSIS 이후의 2005년 제2차 WSIS 대응전략 및 향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글로벌 정보화전략의 추진을 위해서 1) 디지털외교의 인프라 정비, 2) 디지털외교의 한국적 의제 발굴, 3) 디지털외교의 추진주체 정비 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준비작업을 체계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디지털외교의 물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여태까지는 주로 국가정보인프라(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온 정보통신망의 정비나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사업 등에 글로벌 정보사회로의 지향성을 가미함으로써 한국의 정보화가 대외적으로 개방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이 대표적인 시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2002년 10월에 개통된 전자정부 11대 사업 중에서 디지털외교와 관련된 부문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외교통상부가 130여 개의 재외공관을 네트워크화하는 광역외교망인 외교통상정보시스템(FATIS)의 구축을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이

---

9) 2003년 초 정보통신부의 후원하에 WSIS에서 제기될 의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워킹그룹이 조직되어 다음의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다. 1) 기반시설 구축과 연결성 확보, 2) 인적자원개발 및 접근권 확대, 3)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4) 기술이전 및 표준화, 5) 응용 및 콘텐츠 관련 이슈, 6) 정책, 제도, 규범의 정비 등.

10) WSIS를 위한 한국포럼은 2003년 5월 23-24일에 개최되었으며, 관련된 자료는 WSIS 한국포럼의 웹사이트에 수록되어 있다. <http://kforum.unesco.or.kr/>

는 외교통상부의 개별 부처차원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국가적 차원의 전자정부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대내외적인 차원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자체도 통합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외교 관련 정부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조율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sup>11)</sup>

사이버외교의 자원이 되는 인터넷상의 디지털컨텐츠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기술표준상의 호환성과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공공부문 웹사이트들이 얼마나 글로벌 정보사회의 기준에 맞는지 본격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자랑한다고 하면서도 한국의 전자정부를 소개하는 영문 또는 다국어 웹사이트나 소개책자 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 역설적 현실 하에서 제대로 된 디지털 외교전략이 생겨날 리 만무하다.

둘째, 정보화의 영역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은 한국적 의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의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야 할 것이다. 글로벌 정보사회의 새로운 이슈들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디지털외교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 양성하고 디지털외교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T분야는 그 속성상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디지털외교의 담당자가 IT이슈 자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효과적인 국제협력이나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IT 관련 기술·정보·지식 분야의 실무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그룹과 국제무대에서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외교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그룹의 유기적 네트워크화가 시급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의 현실은 새로운 전문인력의 양성문제는 고사하고라도 현재 산재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활용하는 데에서도 거리가 멀다. 시급히 이러한 전문가 풀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외교에서 한국이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에서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충하는 이해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할 기술적 방안 등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정보사회와 관련된 제반 아젠다를 개발하는 연구작업을 체계적으로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제발굴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이해관계를 정보화 분야의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디지털외교의 추진체계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국내차원 중심의 정보화 추진체계에 대외지향적 요소를 가미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3의 외교영역’으로서의 기술·정보·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외교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의 존재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국가 CKO(Chief Knowledge Officer)’ 또는 과학기술정보 보좌관 등의 구상을 실질적으로 가동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외교의 과제는 지도자 한 사람 또는 어느 특정 부처의 능력

11) 외교통상부(2001. 11.), 「중장기 외교정보화추진 기본계획(2002-2006)」.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디지털외교의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호흡을 맞출 정부부처간의 공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외교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외교전담부처로서의 외교통상부와 IT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 및 과학기술부 등의 실무자들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외교를 위한 상설조직을 마련하는 부담을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종의 태스크포스(task force) 조직인 버추얼기관(virtual agency)의 수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버추얼기관에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나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약하는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도 디지털외교관(digital diplomat)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sup>12)</sup>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외교 전담부처 및 정보통신 실무부처들의 조직개혁과 연결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정보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보사회의 미래나 디지털 외교전략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기반을 도출하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한다.

#### IV. 맺음말

글로벌화와 정보화가 만나는 21세기 초의 길목에서 WSIS에 대한 대응의 과제가 미래국가전략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직 초보 단계이기는 하지만 WSIS의 준비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의제와 논점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정보화의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정보화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는 구조변화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세계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보화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지난 십여 년 간 진행해온 국내외 정보화전략의 현주소를 점검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WSIS 대응전략은 머지않은 미래에 21세기 세계질서 변동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의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19세기 후반 새로운 표준으로서의 근대 과학기술문명의 전파에 둔감하게 반응했듯이, 지식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문명표준(standards of civilization)의 등장에 대해서도 그리 말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는 못하

---

12) Brown, Sheryl J. and Margarita S. Studemeister(2001), "Virtual Diplomacy: Rethinking Foreign Policy Practice in the Information Age," *Information and Security*, 7.; Rosecrance, Richard(1999), *The Rise of the Virtual state: Wealth and Power in the Coming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특히 우리는 지식이라는 변수의 21세기 국가전략적 함의에 대해 다소 편협한 수준의 이해를 내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여태까지의 정보화전략은 경제·산업전략의 셋방살이 신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좁은 의미의 IT전략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반도체나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폰 등과 같은 몇몇 '성장동력' 분야에서의 성공은 이러한 경제·산업 중심의 정보화전략의 기초를 강화한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보화전략과 안보·외교·사회·문화전략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국가전략과의 사이에는 일정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세계를 지향하는 경제·산업전략으로서의 글로벌 IT전략은 있었을지언정 안보전략과 경제전략을 넘어서 글로벌화와 정보화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구상된 기술·지식·정보 분야의 글로벌 외교전략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21세기를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19세기 문명표준을 따라잡지 못해 식민지의 역사를 겪었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길은 새롭게 등장하는 문명표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상배(2002. 가을), "정보화시대의 외교: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36(3).
- 서보현(외)(2002. 2.), 「국제기구의 주요정보통신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2002. 2.)
- 서보현(외)(2003. 2.),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W SIS)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2003. 2.)
- 외교통상부(2001. 11), 「중장기 외교정보화촉진 기본계획(2002-2006)」(2001. 11.)
- 정보통신부(2002. 4.), 「e-Korea Vision 2006: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 하영선(편)(2001), 「사이버공간의 세계정치: 베스트 사이트 1000 해제」, 이슈투데이.
- Brown, Sheryl J. and Margarita S. Studemeister(2001), "Virtual Diplomacy: Rethinking Foreign Policy Practice in the Information Age," *Information and Security*, 7.
- Dizard, Jr., Wilson(2001), *Digital Diplomacy: U.S. Foreign Policy in the Information Age*. Westport, Conn.: Praeger.
- Mathews, Jessica T. (January/February, 1997), "Power Shift: The Age of Non-State Actors." *Foreign Affairs*.
- Reinecke, Wolfgang H.(1999/2000), "The Other World Wide Web: Global Public Policy Networks." *Foreign Policy*, 117.

- Rosecrance, Richard(1999), *The Rise of the Virtual state: Wealth and Power in the Coming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 Ryan, Michael P.(1998), *Knowledge Diplomacy: Global Competition and the Poli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